

91.1.20

여성계

“지방의회 내뭇 찾자”

공천할당제·연합후보등 갖가지 방안 모색

“현행 선거법으로는 당선 희박” 개정 촉구

지자체 선거를 두달 남짓 앞두고 여성의 지방의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선거법개정 요구, 후보물색과 교육, 선거전략짜기 등으로 여성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줄 것’을 청원했던 여성단체연합과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자체 선거법 개정을 다시 청원할 계획이다.

비례대표제 재청원 계획

여성단체연합 이미경 부회장은 “현재의 지자체 선거법 아래선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 박영숙 부총재도 “이대로 지자체 선거를 치를 경우 여성의 참여없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게 뻔하다”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년동안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비례대표제, 당선쿼터제, 공천할당제, 의석할당제, 정당연기명기부제, 기탁금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연말 여야의 지자체협상 과정에서 민자당의 반대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참여 경험이 거의 없고, 자금·조직력이 남성에 훨씬 뒤지는 여성들이 남성의 치열한 자유경선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보수적 여성단체 모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후보를 꺼리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의 타개책으로 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 소장은 거대여성그룹이면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는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협의회가 한시적으로 연대해 범여성 후보를 내세워 밀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연·여협 연대 의견도

30년 만에 부활되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뽑는 지방의회 의원은 5천1백53명으로, 여성계에선 이 가운데 5~10%는 여성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선거법·선거풍토

아래선 목표의 10%만큼의 실현 가능성도 없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상당히 저조하리라고 보고 있다. 여성민우회 이경숙 부회장은 “선거가 몇억원씩 돈을 쓰는 줄부들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되고 서구의 선거공영제처럼 정책대결로 좋은 사람을 뽑는 풍토가 정착되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줄부들 잔치 안돼야”

경실련 여성분과위원회 성백엽 위원장은 “지역문제에 관심있고 사회개선 의지가 뚜렷한 의식있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명선거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에선 시민단체들과 연대, 돈 안쓰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떠나갈 계획이라고 성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국부인회·YWCA연합회·YMCA 등도 공명선거감시단 발족을 준비중이며, 주부클럽연합회는 부정선거 고발센터(752-4227)를 통해 불법·타락선거 사례를 접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선거감시단 발족 준비중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당에 관계없이 입후보하는 여성을 적극 후원하기로 결정했고, 여성개발원·YWCA·한국부인회 등에선 이달말까지 출마예상자를 확정지어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당쪽의 여성후보 선정작업도 활발하다. 민자당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후보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선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반과 선거전략·대중연설풍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여성국을 ‘여성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평민당은 서울에 여성후보 1~2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의 15~20%는 여성후보로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여성후보를 25%로 잡고 있다. 민중당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가운데 10%를 여성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중인 여성은 여성학자 지은희, 여성운동가 노영희씨 등 20여명으로 이중 여성학자와 여성운동가 전문직여성·주부 등 10명을 서울·농촌·노동자 밀집지역의 후보로 출마시키고, 2월 중순께 여성공약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민중당은 밝혔다. <신연숙 기자>